기후위기의 '재문제화'와 전환 담론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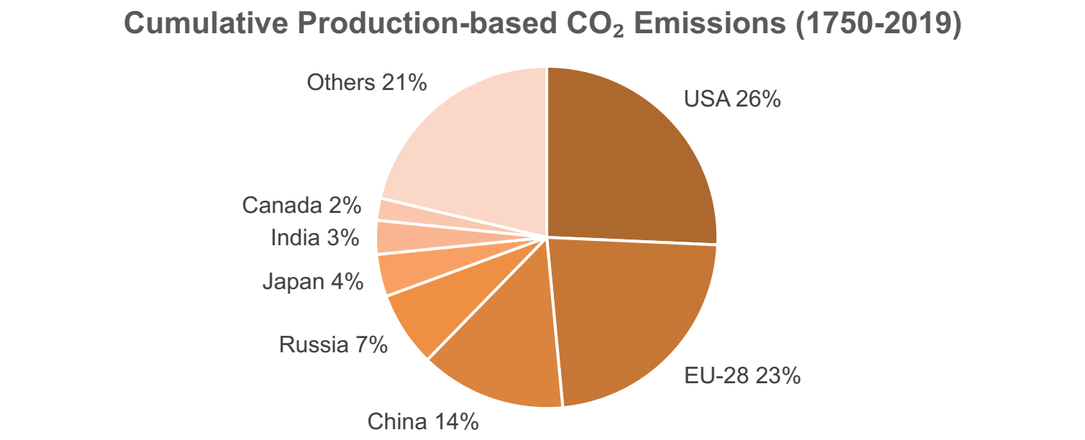
이상준(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서론

- 오늘날의 '탄소 문명'은 역사적으로 유래없는 거대한 풍요로움을 이룩하였으나, 이는 '여성, 자연, 식민지'에 대한 사회적·생태적 착취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정치경제체제가 생태적 한계를 무시하고 자연을 착취하며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함으로써 초래한 오늘날의 기후-생태 위기는 이와 동시에 이 체제가 양산한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다양한 양상으로 서로 교차하고 심화되며 나타나고 있다.
- 그러므로 이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온실가스의 농도라기보다, 자연환경을 불평등하게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다. 이 체제에서 화석연료를 태우고 대기에 온실가스를 '무단 투기'하면서 누가 더 많은 이득을 얻었는지, 반면 누가 '희생 구역'으로 내던져졌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동일한 정치경제체제의 결과로 초래된 것이며, 이 두가지가 나란히 놓여 서로 맞물려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위기와 깊숙히 얽혀 있는 이중의 위기임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주류 담론에서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불가능성을 조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검토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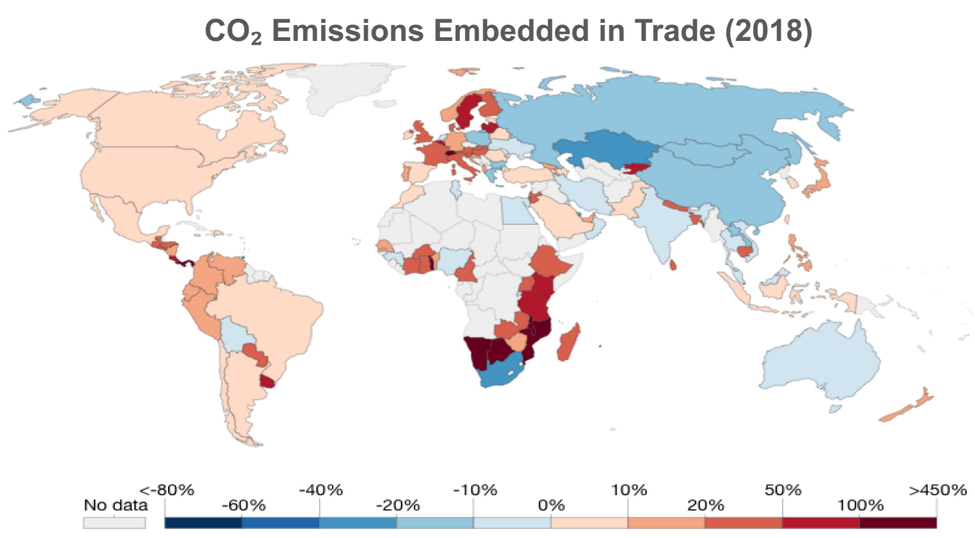
본론

어떤 위기인가 : 기후위기와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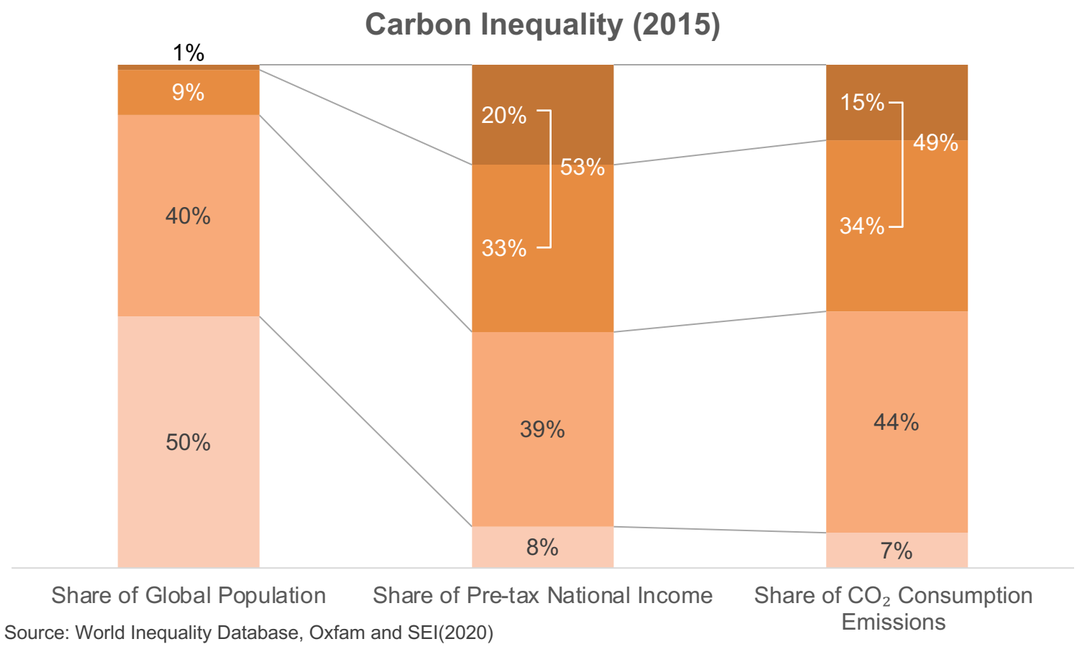
Source: Our World in Data based on the Global Carbon Project
Note: This measures CO_2 emissions from fossil fuels and cement production only – land use change is not included.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transport are not included. EU-28 includes United Kingdom that left from the EU in 2020.

- 탄소 문명이 낳은 전례없는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은 산업혁명이 출현한 세계경제체제의 중심부 국가들로부터 시작되고 확장되었는데, 이는 자연에 대한 무한대의 착취와 함께, 중심부의 사회적·생태적 비용을 주변부로 외부화하는 불평등한 사회적·생태적 교환에 의해 가능했다.
- 이는 경제성장률과 탄소배출량의 국가간 불평등에서 드러나는데, 누적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산업화된 '선진국'이 배출했다는 사실은 이 국가들이 막대한 탄소배출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어 왔음을 보여준다.



Source: Our World in Data based on the Global Carbon Project
Note: Share of CO_2 emissions embedded in trade, measured as emissions exported or imported as the percentage of domestic production emissions. Positive values(red) represent net importers of CO_2. Negative values(blue) represent net exporters of CO_2. (Infographic: https://ourworldindata.org/co2-and-other-greenhouse-gas-emissions/)

- 그런데 최근 여러 신흥공업국들의 경제 성장과 함께 이 국가들의 탄소배출량이 많아지면서 탄소배출량의 국가간 불평등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국가내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불평등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 또한, 급증한 신흥공업국 탄소배출량의 상당 부분은 글로벌 북반구의 산업을 남반구로 이전한 결과로써 북반구의 대량소비 생활양식을 지탱하기 위해 대신 배출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비 기반 배출량 기준으로 탄소 불평등이 매우 극심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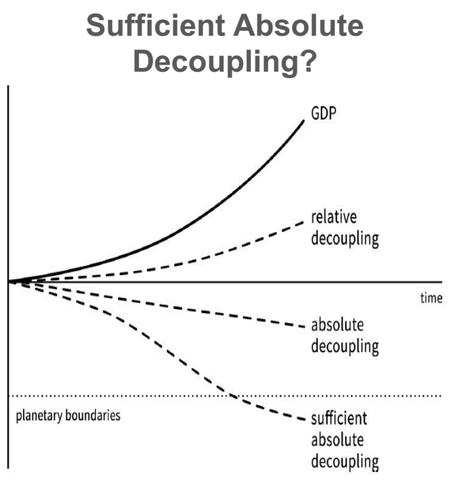


Source: World Inequality Database, Oxfam and SEI(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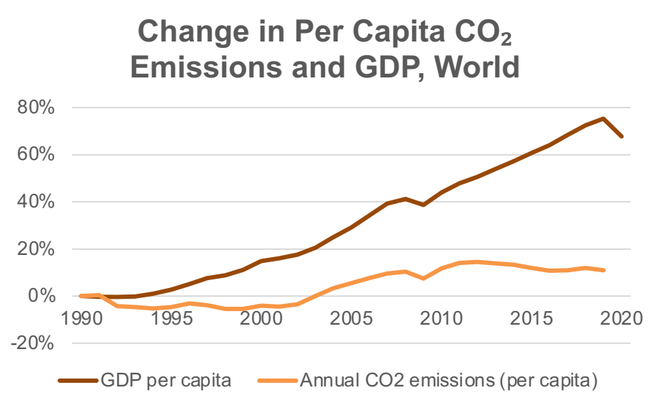
- 또한 기후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기후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이 탄소배출량이 미미한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와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의 피해가 재난에 대한 민감성과 적응 능력에 의해 차등화되기 때문에, 취약한 국가와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사실은 기후위기가 자연과학적으로 정의된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수많은 '위기들'이라는 것을 말하며, 이 위기에 가장 책임이 없는 동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파멸적인 결과를 낳는 역설적인 위기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함께 진행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면서, 결국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상호 교차하며 심화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

-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주류 담론은 기술혁신과 환경 비용의 내부화를 통해 현재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생태적 현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경제 성장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양립하는 '녹색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해결책의 핵심에 놓는다. 구체적으로 탈탄소 기술을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 배출량 간의 탈동조화와,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비용-효과적인 방식의 탄소배출량 감축 방안을 채택한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탄소 문명이 초래한 극심한 사회적·생태적 불평등은 그대로 남겨진다. 예컨대 시장 메커니즘 기반 기후변화 대응책은 과거 탄소를 대량 배출한 국가/기업에게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서의 배출권을 제공하고, 그 책임이 미미하지만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국가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남반구의 토지와 산림을 '약탈'하고 지역 생태계의 탄소 격리 능력을 전유함으로써 북반구 국가들의 감축 책임을 회피하고,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Graph: Raworth(2017)



Source: Data compiled from multiple source by World Bank, Our World in Data based on the Global Carbon Project
Note: GDP is measured in constant 2011 international-$ which adjust for inflation and cross-country price differences.

- 또한 주류 담론의 해결책은 효과성에도 의문이 있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한 채 여러 문제를 낳았다. 또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파리협약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속도로 탄소배출량과 GDP 성장률 간의 탈동조화를 이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녹색 성장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않거나 불합리하고 기이한 기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착취적·추출적인 정치경제체제가 초래한,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라는 지금의 '이중적 위기'는 이 시스템을 고스란히 남겨두면서 단지 이것을 '녹색 분칠(greenwashing)'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책 역시 위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예컨대 한국판 그린뉴딜은 새로운 녹색 신성장 산업 지원과 산업 전환 등을 위한 녹색 경기부양책에 해당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정치경제체제를 존속하면서 불평등을 심화하고, 나아가 '재난 자본주의'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기후위기의 본질, 현재 주류 담론에서 제시되는 해결책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지금 필요한 전환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의 신속하고 광범위하고 전례 없는 변화'다. 이것은 현재 체제 내에서의 부분적 전환이 아니라, 지금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야기한 착취적이고 추출적인 정치경제체제에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치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기후변화는 부자들이 야기하고, 그 피해는 가난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기후위기의 역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하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왔던 자들이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이 겪은 피해를 보상하고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변화를 동시에 초래한 구조적 원인를 교정하는 '회복적'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가짜' 해결책을 앞세워 근본적인 전환을 가로막으며 지금의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변혁을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기득권을 영속화하려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 이 체제의 사회적·정치적 권력관계를 전복적으로 재구성하고, 여기에 근본적으로 내포된 '다른 지역과 사회 집단을 희생시키는 사회경제적이고 생태학적 위기의 외부화'에 맞서 이 위기를 초래한 자들의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보상을 요구하며,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정치적 세력관계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